2060년 장기재정전망

2015. 12. 4.

기 획 재 정 부

순 서

Ⅰ. 추진배경 ····· 1

Ⅱ. 전망방법 및 전제 ····· 2

Ⅲ.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 ····· 3

Ⅳ. 일반재정부문: 국가채무 추계 ····· 5

Ⅴ. 사회보험부문: 지속가능성 분석 ····· 11

Ⅵ. 전망 결과의 시사점 및 향후 대응방향 ····· 14

[참고 1] 장기재정전망 핵심 주요지표 ····· 18

[참고 2] 주요국 장기재정전망 결과 ····· 19

Ⅰ 추진배경

□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최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**다소 약화** 되고 있으나 다른 **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모습**

* 국가채무 비율('16, GDP대비) : 우리나라(40.1%), OECD평균(115.4%)

□ 그러나, **저출산·고령화** 등 급격한 인구변화와 **잠재성장률 둔화** 등으로 **장기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**

○ (수입 측면) 잠재성장률 둔화로 재정수입 증가세가 약화 전망

○ (지출 측면) 국민연금 등 주요 복지제도가 성숙되고 의료비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 전망

□ 이러한 장기 재정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을 위해서는 **장기 시계의 종합적인 재정전망 필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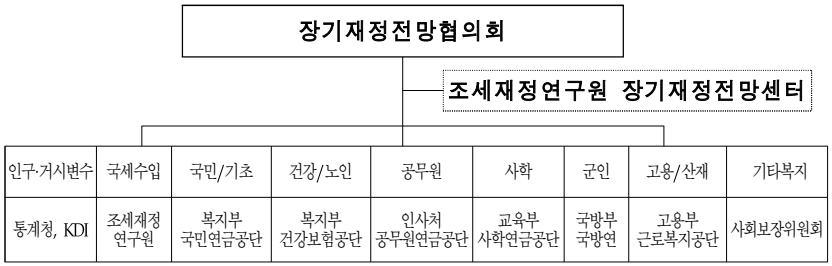
* 미국, EU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인구 고령화에 대한 재정위험 진단을 위해 장기재정전망 실시 중

□ 이번 **2016~2060년 장기재정전망은** 국가재정법령*에 근거하여 2014년 말부터 민관합동 「**장기재정전망협의회****」 중심으로 추진

*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 ③ :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에는 40회계연도 이상을 대상으로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

** 민간위원 8명, 8개 부처 국장 등 27명, 위원장 : 기재부 재정관리관

○ **9개 전문기관**의 분야별 전망을 종합하여 일관성 있는 전망 실시



Ⅱ 전망방법 및 전제

1 전망 방법

① **전망의 전제 도출** (인구, 성장률 등)
→ KDI, 통계청 등

② 추세적 변화에 영향 받는 부분 **추계** (의무지출, 수입 등)
→ 9개 기관* 및 조세재정연구원

* 통계청, KDI, 국민연금공단, 건강보험공단, 공무원연금공단, 사학연금공단, 국방연구원, 근로복지공단, 사회보장위원회

③ 정부가 정할 수 있는 부분 **결정** (재량적 지출)
→ 2개 시나리오: 경상성장률로 증가 또는 세출구조조정 시나리오

④ **장기재정전망**
- 국가채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(일반재정) → **재정수지, 국가채무 추계**
-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별도 기금(계정)으로 운영되는 부분 → **각 사회보험 별 지속가능성 진단**

+

⑤ **민감도 분석**: 기본 시나리오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

○ **'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'**하에 인구, GDP 등 거시경제 변수 변화를 반영하여 **중앙정부 재정 전망**

* '16~'19년은 중기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전망

2 전망의 전제

○ **(인구 전제) '통계청 장래인구추계'** 활용(2011년, 중위 기준)

- 생산가능인구는 '16년, 총인구는 '30년을 정점으로 감소

-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'18년에 고령사회(노인인구비율 14%), '26년에 초고령사회(20%) 진입, '60년에 노인인구 비율 40% 도달

* 노인 절대인구수는 '49년을 정점으로 감소

○ **(성장률 전제) KDI**에서 생산함수법 등을 활용하여 전망('14.12월), 인구감소 등으로 **전망기간 동안 지속 하락, '60년 0.9%**(실질)

'16~'20	'20~'30	'30~'40	'40~'50	'50~'60
3.6%	2.6%	1.9%	1.4%	1.1%

* GDP는 2005년 舊계열 GDP 활용, '12년 기준 GDP는 각각 新(1,377.5조), 舊(1,272.5조)로서 수치상 신계열이 구계열보다 8.3% 높음

Ⅲ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

◇ **총수입과 총지출은 재정 활동 전반을 포괄**하는 지표로서 국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충당하는 **일반재정부문**과 기여금 등으로 운영하는 **사회보험부문**으로 구분

□ **(총수입)** '16년 GDP 대비 25.6%에서 '40년대 초까지 GDP 대비 28% 수준으로 소폭 상승 후, 사회보험수입이 감소하면서 '60년 25.7%로 하락

총수입 전망 (%, GDP 대비)

	'16	'30	'40	'60	연평균 증가
◇ 총수입	25.6	27.8	27.9	25.7	3.8
▪ 국세수입	14.6	14.9	15.2	15.6	4.0
▪ 사회보험수입	6.2	8.6	8.3	5.8	3.7
▪ 기타수입	4.8	4.3	4.3	4.3	3.6

○ (국세수입) GDP 대비 14%대에서 '60년까지 소폭 상승

○ (사회보험수입) 국민연금 기여금 등이 빠르게 증가하는 '30년대 초까지 상승 후 증가율이 하락

○ (기타수입) 중기계획상 '19년 기준 GDP 대비 비중(4.3%) 유지 전제

□ **(총지출)** '16년 GDP 대비 25.3%에서 '60년 32.2%로 상승

총지출 전망 (%, GDP 대비)

	'16	'30	'40	'60	연평균 증가
◇ 총지출	25.3	26.3	28.4	32.2	4.4
▪ 의무지출	12.0	15.4	17.4	21.2	5.2
▪ 재량지출	13.3	10.9	10.9	10.9	3.4
※복지지출	8.1	10.6	12.4	15.5	5.4

* 의무지출은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의 급여지출 및 정부지원금과 지방이전재원, 이자지출 등을 포함

○ 총지출 중 의무 및 재량지출 비중은 '16년 47:53에서 '60년에는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인 66:34로 향후 의무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할 전망

* OECD 주요국의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 비중('09~'11년 평균)
미국: 71.2%, 영국: 63.5%, 프랑스: 67.3%, 이탈리아: 69.7%

○ (의무지출) '16년 GDP 대비 12.0%에서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로 '60년 21.3%로 상승

- 연금·건강보험 관련 지출 : 국민·사학·공무원·군인·기초연금 및 건강·노인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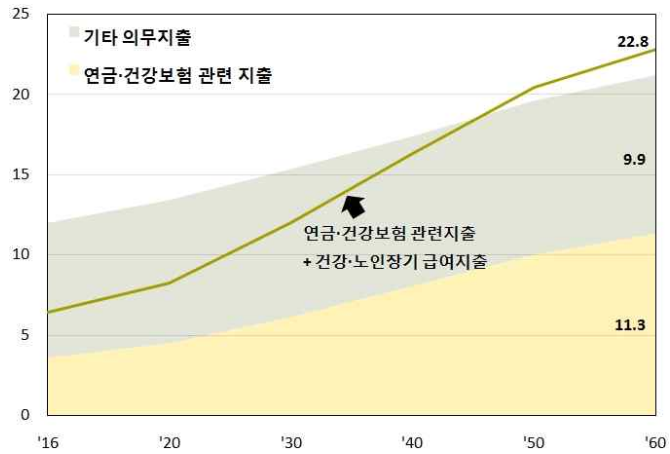
	'16	'30	'40	'60	증가율
(% GDP 대비)	3.6	6.1	8.1	11.3	6.6

*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건강·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까지 고려시 연금·건강보험 관련 지출은 GDP대비 22.8%까지 증가

- 지방이전재원 : 지방교부세, 지방교육재정교부금

	'16	'30	'40	'60	증가율
(% GDP 대비)	5.1	5.5	5.6	5.8	4.1

의무지출 추이 (%, GDP 대비)



○ (재량지출) 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따라서 지출 추이가 달라지며 재량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과 동일한 경우, '16년 GDP 대비 13.3%에서 '60년 10.9% 수준 유지(중기계획상 '19년 재량지출 수준)

※ (복지지출) '16년 GDP 대비 8.1%, 총지출 대비 31.8%에서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'60년 GDP 대비 15.5%, 총지출 대비 48.3%로 빠르게 상승(연평균 5.4%)

Ⅳ 일반재정부문: 국가채무 추계

◇ 일반재정부문은 총수입 및 총지출 구성 요소 중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부문으로 국가채무 추계 대상

1. 기본 시나리오

□ 재량지출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두가지 시나리오로 구성

① **시나리오1(경상성장률)** :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로 증가

② **시나리오2(세출구조조정)** : 시나리오1 전망에서 매년 자연증가하는 재량지출액 중 10%를 세출구조조정

2. 전망결과

1 **재정수지 전망**(GDP 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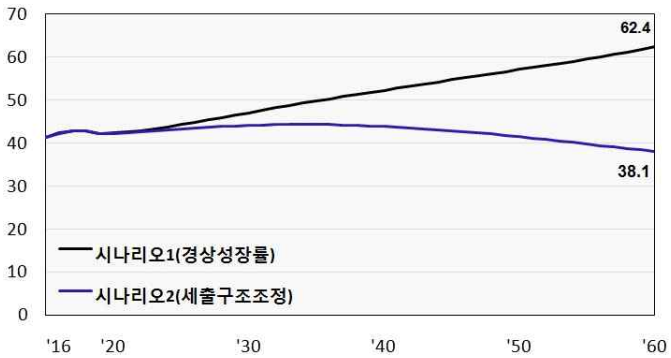
○ 시나리오1의 경우, △1.6~△1.8% 수준의 관리수지적자를 유지

○ 시나리오2의 경우,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'60년 △0.2% 수준

2 **국가채무 전망**(GDP 대비)

○ 시나리오1의 경우, 국가채무가 지속증가하여 '60년 62.4%까지 상승

○ 시나리오2의 경우, '34년 44.3%를 정점으로 '60년 38.1%로 하락



3. 미래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

1 **시나리오1 : 경상성장률 시나리오**

① 세출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가 지속되어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누적

○ 전망기간 중 재정수입은 GDP 대비 20~21% 수준, 재정지출은 22~23%를 유지하여 전 기간에 걸쳐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초과

② 지출항목으로는 고령화 지출, 지방이전 등의 증가율이 높고, 국채발행 누적에 따라 이자지출이 누증

일반재정 수입·지출 증가율(2016~206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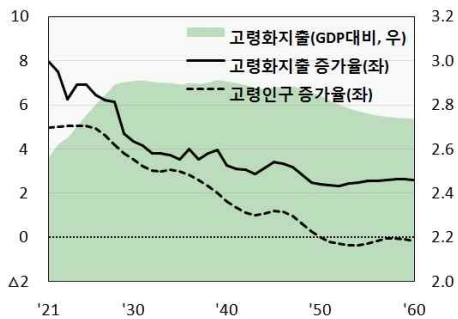
재정수입	고령화 관련 지출	지방이전재원	이자지출	재량지출
3.9%	4.4%	4.1%	4.9%	3.4%

○ **(고령화 지출)**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 지출은 GDP 대비 '16년 2.2%에서 '60년 2.7%로 증가

* 사회보험부문의 고령화 지출까지 포함시 '60년 11.3%까지 증가하고 총지출에 계상되지 않는 건강·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 포함시 '60년 22.8%까지 급증

** 베이비붐 세대('55~'63년생)가 노인으로 편입되는 '30년까지 관련 지출 증가율도 높고 노인인구수가 감소하는 '50년 이후에는 증가세 둔화

고령화 지출 전망 (%)



고령인구 및 지출 증가율 (%)

	고령인구	고령화 지출	재정지출
'20~'30	4.6	6.3	5.1
'30~'40	2.7	3.8	3.8
'40~'50	0.9	3.0	3.4
'50~'60	△0.2	2.5	3.0

○ **(지방이전재원)**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내국세의 39.5%를 차지하는 지방이전재원 증가율(4.1%)은 재정수입 증가율(3.9%)을 지속 상회

	'16	'30	'40	'60	증가율
(%, GDP 대비)	5.1	5.5	5.6	5.8	4.1

○ **(이자지출)** 관리수지 적자 및 국채발행 누적으로 이자지출 증가

	'16	'30	'40	'60	증가율
(%, GDP 대비)	1.2	1.6	1.6	1.9	4.9

○ **(재량지출)** 재량지출은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입보다 증가율이 낮아 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를 빠르게 증가시키는 요인은 아님

	'16	'30	'40	'60	증가율
(%, GDP 대비)	12.9	10.6	10.7	10.7	3.4

2 시나리오2 : 세출구조조정 시나리오

○ 정책적 선택이 가능한 재량지출을 세출구조조정할 경우, 국가채무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 가능('60년 38.1%)

* 시나리오1 전망에서 매년 자연증가하는 재량지출액 중 10%를 세출구조조정

○ 재량지출은 GDP 대비 '60년 9.9%까지 감소하고, 이에 따라 이자지출도 낮아져 국가채무는 '34년 44.3%를 정점으로 해서 점차 안정화

(%, GDP 대비)

	'16	'30	'40	'60	증가율
재량지출	12.9	10.2	10.0	9.9	3.2
이자지출	1.2	1.5	1.3	1.1	3.7

4. 민감도 분석

◇ 향후 장기재정전망상의 재정건전성을 **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**과 **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**에 대한 **민감도를 분석**

1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

① 신규 의무지출 도입

- **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** 신규 의무지출이 도입될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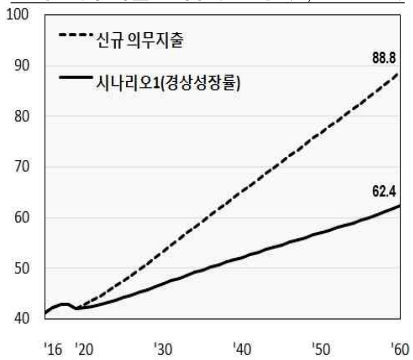
⇨ '20년에 10조원 수준의 신규 의무지출 도입시 '60년 국가채무 비율은 경상성장률 시나리오 대비 26.5%p 증가(88.8%)

② 의무지출 단가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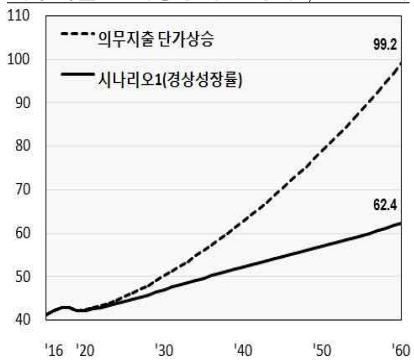
- 기존 복지지출의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

⇨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매 5년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연계·인상할 경우 '60년 국가채무비율은 경상성장률 시나리오 대비 36.8%p 증가(99.2%)

신규 의무지출 도입시 전망 (%, GDP 대비)



의무지출 단가상승시 전망 (%, GDP 대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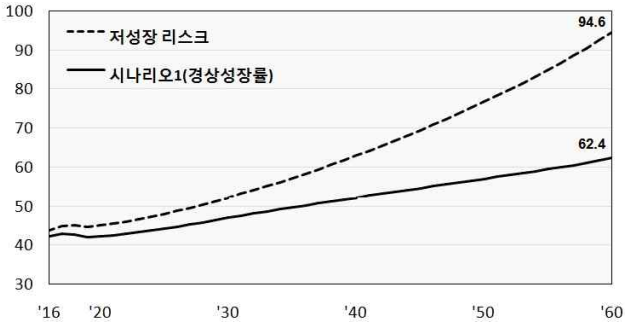


③ 저성장 리스크

⇨ 경제 구조개혁과 성장 잠재력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, '60년 국가채무비율은 경상성장률 시나리오 대비 32.2%p 증가(94.6%)

* '16~'60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시나리오1(경상성장률) 대비 0.3%p(경상기준 0.8%p) 하락 가정 : 시나리오1 1.9% vs. 저성장 1.6%

저성장 리스크 감안시 국가채무 전망 (%, GDP 대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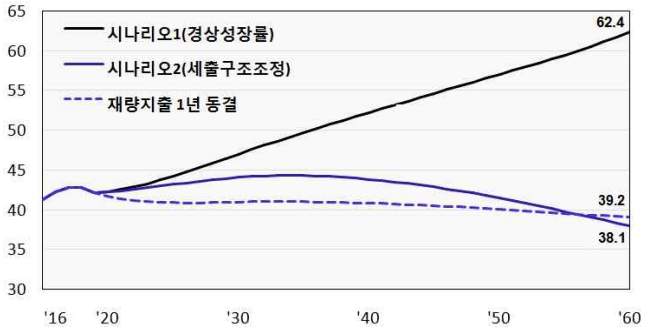
2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

① 세출구조조정

⇨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통제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시 '60년 국가채무비율을 40% 이내로 관리 가능

재량지출 증가율	경상성장률 (시나리오1)	세출구조조정 (시나리오2)	재량지출 1년 동결
'60년 국가채무	62.4%	38.1%	39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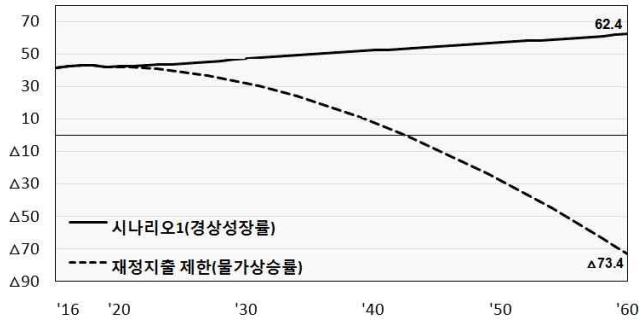
세출구조조정시 국가채무 전망 (%, GDP 대비)



② 재정지출 제한

⇨ 재량지출 증가율을 물가상승률(CPI) 수준(연평균2.2%)으로 제한시 '60년 국가채무비율은 △73.4%으로 순채권이 발생 가능

재정지출 제한시 국가채무 전망 (%, GDP 대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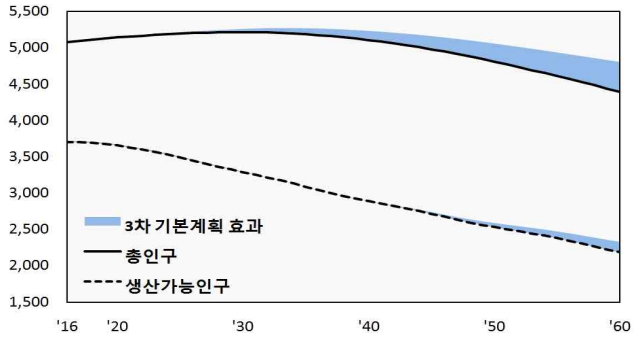
③ 저출산·고령화 대책에 따른 성장률 제고

⇨ 출산율을 높여 생산가능인구 감소추세를 완화하고, 미래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경우, 재정건전성은 개선될 전망

※ 출산율 제고에 따른 성장률 견인효과는 생산가능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'45년부터 가시화될 전망

< 합계출산율(명) >	'14	'20	'30	'45~
▪ 현 인구전제	1.2	1.3	1.4	1.4
▪ 저출산·고령화대책	1.2	1.5	1.7	2.1

저출산·고령화 3차 기본계획 상 인구추이 (만명)



Ⅴ 사회보험부문: 지속가능성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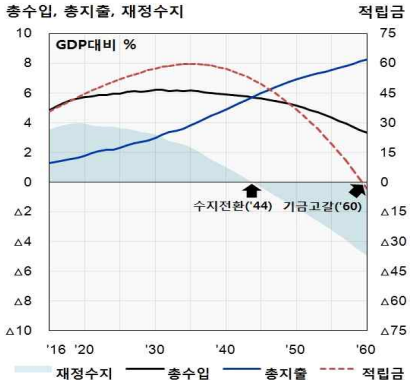
◇ 사회보험 부문은 **사회보장성기금**과 **재정지원을 받는 연금 및 보험**으로 구분하여 재정전망

1. 사회보장성기금* 연금 및 보험

* 사회보장성기금은 수지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국고보전은 없음

① 국민연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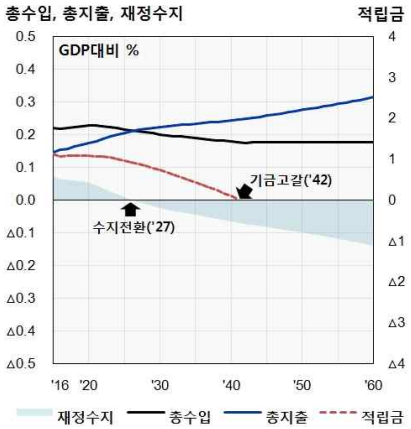
- 재정수지 : '19년 흑자 최대치 → '44년 적자 발생
  ('16)3.7 → ('45)△0.3 → ('60)△4.9
- 적립금 : '35년 적립 최대치 → '60년 기금 고갈



② 사학연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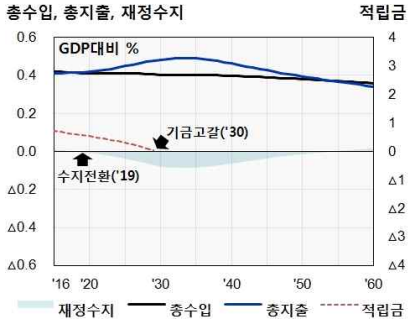
- 재정수지 : '16년 흑자 최대치 → '27년 적자 발생
  ('16)0.06 → ('45)△0.1 → ('60)△0.1
- 적립금 : '19년 적립 최대치 → '42년 기금 고갈

* 사학연금 개혁으로 적자전환시점이 6년 연장('21→'27년), 기금고갈시점은 10년 연장('32→'42년)



③ 산재보험

- 재정수지* : '60년 흑자 최대치
  '19년 적자전환 → '55년 흑자전환
  ('16)0.01 → ('45)△0.04 → ('60)0.02
- 적립금 : '16년 적립 최대치 → '30년 기금 고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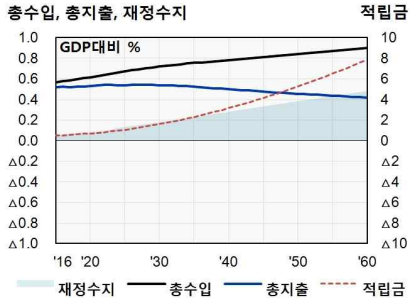


* '19년부터 '54년까지 적자이나 근무 환경 개선으로 재해율이 감소하여 '55년 흑자 전환, 적자 규모는 △0.09~△0.01%의 미미한 수준으로 보험요율 인상으로 해결 가능 전망

④ 고용보험

- 재정수지 : 흑자 유지
  ('16)0.05 → ('45)0.3 → ('60)0.5
- 적립금 : 지속 증가
  ('16)0.5 → ('45)4.2 → ('60)7.9

*「고용보험법」 개정 추진에 따른 보장성 강화 및 보험료율 조정 시 재추계 필요



⇨ 사회보장성기금 中 **국민연금 및 사학연금**은 **지속가능성 위험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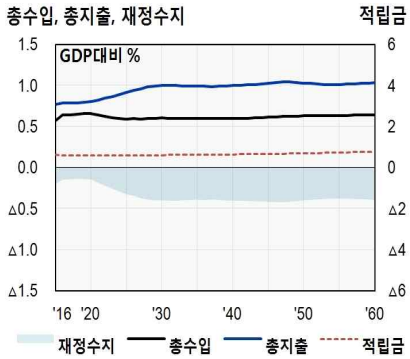
2. 적자전액 또는 수입 일부를 재정지원 받는 연금 및 보험

① 공무원연금

- 재정수지 : 지속 적자
  ('16)△0.1 → ('45)△0.4 → ('60)△0.4
- 적자보전 : 0.14% 수준으로 증가
  ('16)0.05 → ('45)0.14 → ('60)0.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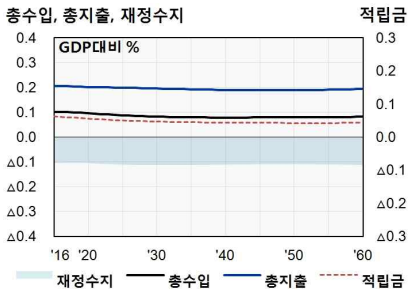
* 금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'60년까지 적자보전 누적액의 43% 수준 절감

* 개혁의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는 수지가 흑자이나, 과거 제도 영향이 남아있어 적자 지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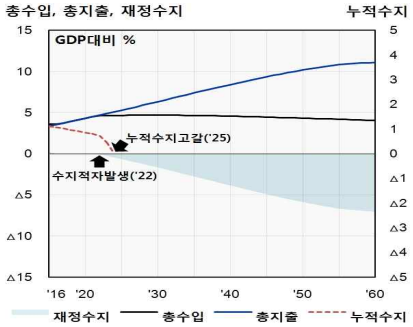
② 군인연금

- 재정수지 : 지속 적자
  ('16)△0.1 → ('45)△0.1 → ('60)△0.1
- 적자보전 : 0.1% 수준 유지
  ('16)0.1 → ('45)0.1 → ('60)0.1



③ 건강보험

- 재정수지 : '16년 흑자 최대치
  → '22년 적자 발생
  ('16)0.02 → ('45)△4.9 → ('60)△7.0
- 누적수지 : '25년 고갈
- 재정지원 :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20%
  ('16)0.6 → ('45)0.7 → ('60)0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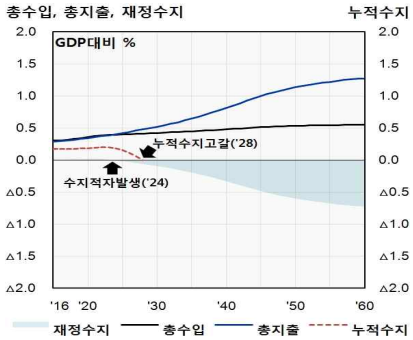


* 당기수지균형을 위해 보험요율을 법상 상한인 8.0%까지 인상('22년까지) 후 유지 전제

*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지출 비중을 '13년 53.4%에서 OECD평균인 70%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전제로 전망

④ 노인장기요양보험

- 재정수지 : '21년 흑자 최대치
  → '24년 적자 발생
  ('16)0.01 → ('45)△0.5 → ('60)△0.7
- 누적수지 : '28년 고갈
- 재정지원 : '30년 지원 최대치
  → '30년 이후 하락세
  ('16)0.04 → ('45)0.05 → ('60)0.04



*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은 현행(건강보험료액의 6.55%) 유지하되, 건강보험요율은 법상 상한선인 8.0%까지 인상 후 유지 전제

⇨ 공무원 및 군인연금은 **적자보전이 지속**될 전망이며,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**지속가능성 위험**

Ⅵ 전망 결과의 시사점 및 향후 대응방향

1. 일반재정 부문

◇ 일반재정부문은 재정건전성 모범 국가로 평가받는 현행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, 세출구조조정 노력이 지속될 경우, 중장기 재정건전화의 공고한 기반 확보 가능

□ '60년까지의 우리나라 장기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며 국제기구 등에서 재정건전성 모범 국가로 평가받는 현재 재정 상황과 전망결과가 부합

* IMF('15.6월) :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여력을 세계 최고수준(세계에서 2번째로 충분한 재정여력 보유)으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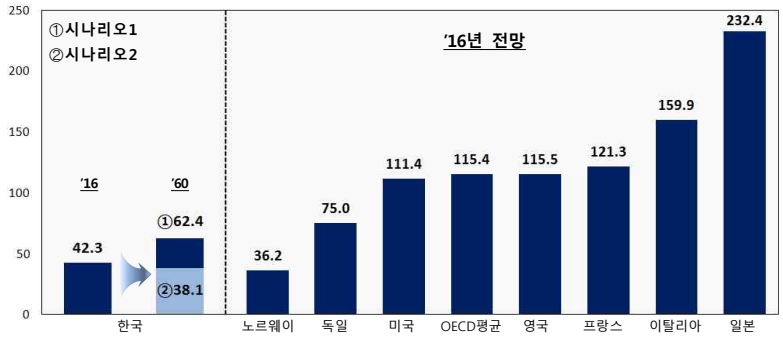
OECD('15.11월) : 위기극복 과정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건전화가 필요없는 국가로 평가

Moody's('15.4월), S&P('15.9월) 등 신용평가기관 :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상황을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시 긍정적 요인으로 검토

○ '60년 국가채무비율(시나리오1, 62.4%)은 '16년 OECD 평균(115.4%)의 절반 또는 EU의 권고 수준(60%)을 약간 상회

-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출구조조정 노력을 병행할 경우 40% 이내로 건전 재정 기반을 확립 가능

2016년 국가채무 GDP대비 비율 (%)



* 우리나라 '16년 국가채무비율(42.3%)는 구 GDP기준 (신계열 기준 40.1%)

□ 재원 확보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, 지출증가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**방만한 재정운영, 경제 구조개혁 및 성장잠재력 확충이 저조**하여 성장률이 저하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될 우려

⇨ 일반재정부문의 **재정건전화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**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

① 재원 대책이 없는 **신규 의무지출 억제**

- 한번 도입된 의무지출은 폐지가 어렵고, 기존 의무지출도 지원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이 있을 경우,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

⇨ **재원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** 신규 **의무지출은 도입을 금지**하는 **Pay-go 제도 도입 필요**

② 재량지출에 대한 **세출구조조정**

- 향후 복지 등 의무지출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비하여 재량지출을 지속적으로 세출구조조정할 필요

⇨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억제하는 **재정준칙 도입** 및 **세출구조조정 필요**

③ **재정개혁**

- 기존 의무지출 등 재정제도의 개선으로도 재정건전성 제고 가능

⇨ 인구 구조 등 환경 변화에 따라 **재정수요가 감소하는 분야** 등에 대한 **지속적인 재정개혁 필요**

2. 사회보험부문

◇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저부담-고급여 체계를 **「적정부담-적정급여 체계」로 전환**하는 개혁이 긴요

□ 사회보험분야는 연금 및 보험 별 주기적인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**선제적으로 개혁**하여 **지속가능성을 확보**할 필요

○ 금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'60년까지 적자보전금을 43% 수준 절감하였고, 사학연금 개혁으로 적자전환시점이 6년 연장('21→'27년)되는 등 지속가능성이 제고

* 단계적 기여율 인상, 지급률 인하,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및 수급자 연금동결 등

□ 개혁이 없을 경우, 일정 시점에서 **국민부담의 급격한 증가** 또는 **보험혜택의 축소**를 야기

① 사회보험 기금고갈 문제를 **보험요율 인상**으로 대응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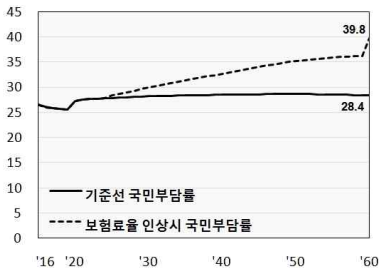
⇨ '60년 **국민부담률**이 **11.4%p 상승**(28.4% → 39.8%)

② 사회보험 기금고갈 문제를 **급여지출 축소**로 대응*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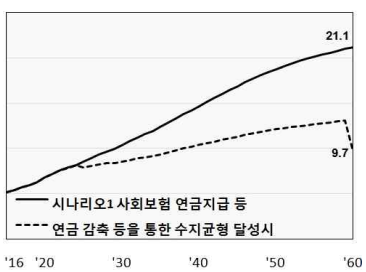
* 수지 적자 발생시 급여지출을 축소하여 수지 균형 유지

⇨ '60년 **국민혜택**이 당초 대비 **46% 수준**으로 **축소** (지출 △11.4%p)

국민부담률 상승 전망 (%, GDP 대비)



급여지출 축소 전망 (%, GDP 대비)



□ 세대간 형평 문제,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고려하여 **「적정부담-적정급여 체계」로 전환**하는 개혁이 긴요

○ 사회보험분야는 복지제도 성숙도가 **높은 주요 선진국도 재정악화 문제에 직면**하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**개혁을 추진 중**

* 사회보장제도 운영 경험이 오래된 유럽·미국·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연금통폐합 및 수급연령상향 조정, 수혜자 부담금 인상 등 의료보험과 연금 제도개혁을 지속 추진

3. 향후 대응방향

◇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「① **재정준칙 도입**, ② **사회보험 개혁**, ③ **인구감소 대응 및 중장기 성장률 제고**」 필요

1 **(재정준칙 도입)** 적정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**재정준칙 도입 추진 필요**

○ **재량지출 증가율을 일정수준** 이하로 유지하는 **재정준칙 도입**

○ 의무지출의 경우, 신규 지출 도입시,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계획을 의무화 하는 **Pay-go 제도 도입 추진**

⇨ 국회 계류 중인 **Pay-go 제도 등 재정준칙 추진**

2 **(사회보험 개혁) 중장기 지속가능성이 유지**되도록 **개혁 추진 필요**

○ 현행 부담·급여 구조에서는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등 유지가 곤란

○ **적정부담 및 적정급여 수준, 연금재정 건전성**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선택패키지를 검토 · 제시하여 **사회적 합의도출 지원**

⇨ 사회보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**개혁 추진**

3 **(인구감소 대응 및 성장률 제고)** 저출산·고령화에 근본적으로 대비하고 인구감소 대응 및 성장률 제고를 위한 **재정전략 필요**

○ 결혼·보육·교육 등 전과정에서 **가족친화적 재정지출을 확대**하여 **출산율 제고**

○ 청년·여성·노인 경제활동 유도, 인적자본투자 · R&D 지원 등 **중장기적 생산성 향상 유도**

⇨ 제3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,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및 미래대비 **장기재정전략을 수립**

4 **(위험 모니터링)** 향후 재정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**모니터링**하여 **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**해 나갈 계획

참고 1 장기재정전망 핵심 주요지표

1 **성장률 및 인구** (KDI 전망, 통계청 전망)

(단위: %)

	'16~'20	'20~'30	'30~'40	'40~'50	'50~'60
▪ 성장률	3.6	2.6	1.9	1.4	1.1

* 각 구간별 연평균

(단위: 천명)

	'16	'20	'30	'40	'50	'60
▪ 총인구	50,801	51,435	52,160	51,091	48,121	43,959
▪ 생산가능인구	37,039	36,563	32,893	28,873	25,347	21,865
▪ 노인인구	6,864	8,084	12,691	16,501	17,991	17,622
▪ 학령인구(6~17세)	5,946	5,448	5,320	4,947	4,023	3,621

2 **재정총량 관련 주요지표** (경상성장률 시나리오 기준)

(단위 : %)

	'16~'20	'20~'30	'30~'40	'40~'50	'50~'60
① 총지출 증가율	4.6	5.5	4.5	4.0	3.4
▪ 의무지출 증가율	8.7	6.2	5.1	4.5	3.7
- 9개 사회보험 증가율	10.8	7.8	6.3	5.3	4.0
▪ 재량지출 증가율	0.6	4.7	3.8	3.2	2.9
② 총수입 증가율	7.1	5.0	3.8	3.1	2.2

3 **의무지출 비중** (경상성장률 시나리오 기준)

(단위 : %)

	'16	'20	'30	'40	'50	'60
▪ 총지출 대비	47.4	55.1	58.4	61.4	64.2	66.0
▪ GDP 대비	12.0	13.4	15.4	17.4	19.6	21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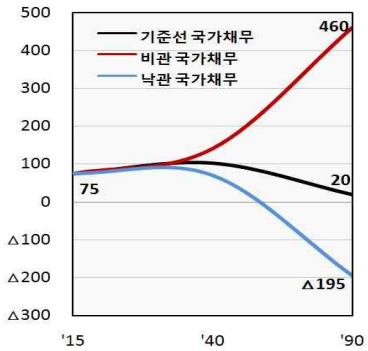
참고 2 주요국 장기재정전망 결과

□ 미국, 호주, 뉴질랜드 등 **주요국**에서는 **장기재정전망**을 **1~5년 주기로 시행중**

○ **(미국)** 「**Analytical Perspectives**」 (OMB, 매년), 「**Long-Term Budget Outlook**」(CBO, 매년) 에서 장기재정전망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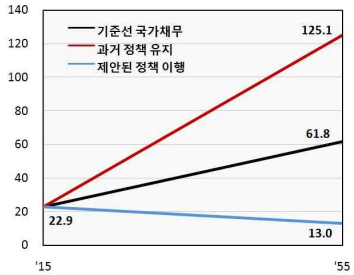
- OMB는 3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정책변화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

* CBO는 인구, 성장률, 이자율, 보건비용 등 4개 분야를 종합해 시나리오 구성



○ **(호주)** 「**'15 Intergenerational Report Australia in '55**」(매5년) 에서 장기재정전망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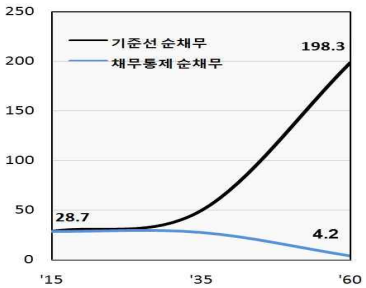
- 기준선(현재 상황 유지) 외에 과거 정책(예산안 제출 전)을 유지하는 경우, 예산안에 제안된 정책을 이행한 경우 등에 대한 추가 시나리오를 분석



○ **(뉴질랜드)** 「**Affording Our Future**」 (재무성, 매4년)에서 장기재정전망 실시

- 기준선전망 외에 채무통제*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 시나리오를 분석

* '20년까지 GDP 대비 20% 미만으로 채무를 유지



○ **(캐나다)** 「**Fiscal Sustainability Report**」(PBO, 매년)에서 장기재정전망 실시하며 기준선 전망 제시

- 순채무 : ('15) 약30% → ('35)14.7% → ('60) △22.4% → ('85) △81.6%